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기사의 삭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련 기사 또는 복제물에 대한 검색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는 취지이다.


셋째, 막스 모슬리 사건과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검색 필터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막스 모슬리 사건에서 무한재생산을 부추긴 가장 큰 요소는 언론기사가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이었다. 막스 모슬리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검색 필터링 조치까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 등으로 뉴스 공급은 더 지능적으로,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비선형 미디어가 저장소로서의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용자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눈앞에 원하는 뉴스를 가져다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또, 이용자가 원하면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공개된 정보 또는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선호도 등을 연결시켜 그야말로 백과사전보다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형 미디어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다면 향후 뉴스에 의한 피해의 파급력이나 전파력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선형 미디어에 의한 구제수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없이 줄어들고 뉴스에 의한 피해는 눈사태(avalanche)처럼 우리를 덮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현실에 맞는 언론피해 구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 

정정 · 반론 없는 북한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성희 ·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학부 교수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 언론의 북한관련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신청을 해 온다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고위층 인사를 고사포에 의해 무참히 처형된 것으로 보도하고, ‘최고 존엄’ 주변의 사생활을 무차별 폭로하며,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흥미 위주로 그려내는 보도들이 조금은 신중하게 변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같이 경색된 남북 상황에서 이런 상상은 부질없는 일이다. 북한이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거나, 불만이 있다면 즉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한의 보도를 극렬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으로 대신할 테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남과 북이 갈 길이 더욱 멀고 험하게 느

껴진다. 통일이 된다면 분단 이후 남한이 걸어온 자유 언론의 여정을 북한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수십 년 걸려 익힌 독자의 권익과 피해구제라는 개념을 인권이 미약한 북한사회가 이해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나 통일 후 걱정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당장 오늘날 자유의 비대칭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쏟아내는 북한 관련 보도는 이대로 괜찮은지 성찰이 필요하다. 직접 가볼 수 없는 폐쇄된 사회와 제한된 취재원, 거기에 이념적 태도라는 제한 요소를 안고 있는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확인이 불가능하니 추측이 난무하고, 문제 삼는 상대가 없으니 설사 오보라 해도 바로잡을 일이 없기 때



문이다. 부정확하고 미확인된 북한 관련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낱말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다. 통일로 가는 길에 도움은커녕 해악으로 작용할지 모른다. 언론은 현재의 북한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나쁜 저널리즘’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로잡기 위한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길고 오래된 오보의 역사

북한 관련 오보와 그릇된 정보의 역사는 길고, 사례는 풍부하다. 대표적 오보는 1986년 11월 ‘김일성 사망’ 보도이다. 동경에서 처음으로 탐지된 이 기사는 처음에는 ‘설’이었으나 ‘김일성 피격 사망’이라는 단정적인 보도로 바뀌었고, 다음 날 김일성이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임이 판명되었다. 1996년 김정일의 본처로 알려진 ‘성혜림 망명설’도 잘못된 보도였다. 성혜림이 러시아에서 북한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후속보도가 따르고 당시 안기부장이 국회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다. 1994년에 언론은 러시아 안보전략연구소 고문 블라디미르 쿠마초프의 발언을 전한 일본 지지통신과 프랑스 AFP통신을 인용해 ‘북한 핵 실험’ 보도를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쿠마초프 고문이 언론에 난 내용을 보고 개인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발뺌하면서 이 보도 역시 오보로 남았다.

2011년 김정은 방중 기사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었으며, 2012년 ‘북,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에 10일까지 전원철수 통보’ 기사는 10일까지 통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와전된 오보였다. 같은 해 도쿄신문의 고미요지 편집위원이 김정남과 교환한 이메일을 모아서 낸 책을 인용해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이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필요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고미요지 편집위원이 “그 책에 천안함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고, 해당 언론은 정정보도를 했다.

2013년 6월 언론은 김정은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한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되었다며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심지어 국정원은 은하수 단원들이 가족 앞에서 기관총으로 난사되어 처형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자극적인 뉴스는 1년 반 후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하자 현송월 단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역시 ‘설’에 그쳤음이 드러났다.





현송월을 검색어로 하면 뜨던 수백 건의 기사들은 결국 모두 ‘오보’였던 것이다.

2014년 9월 김정은 제1비서가 40일간 잠적하자 출처 불명의 온갖 추측성 보도가 언론을 장식했다. 평양 계엄령 선포설, 정신병설, 쿠데타설, 김여정의 대리 통치설로 한동안 언론이 시끄럽다가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결국 ‘설’로 끝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언론이 확인절차를 철저히 준수했거나 보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오보다.

정보기관의 잘못과 언론의 오보

근원적으로 막기 힘든 오보도 있다. 정보기관의 그릇된 정보가 원인인 경우다. 가장 최근의 사

례는 올해 5월 개최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영전되어 모습을 드러낸 일이다. 리영길은 지난 2월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방송을 포함한 외신들은 리영길의 복권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남한 정보 당국의 잘못된 정보 판단을 문제 삼았다. AP통신은 “한국 정보기관의 또 다른 실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리영길 관련 정보기관의 실책이 문제되자 국정원은 “당시 단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는데 외부에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대북 관련 정보는 국정원이 직접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알려지는데, 국회 보고에서 ‘숙청’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한 것이 국회 정보위의 브리핑을 거치면서 언론에는 ‘처형’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숙청은 권력

에서 밀려난 것을 말하지만 처형은 죽였다는 뜻으로 매우 다른 의미이다. 정보기관의 처리 미숙과 언론의 부주의가 결합하면 대형 오보는 예정된 수순이다.

북한은 당 대회를 취재하러 온 외신기자들에게 극히 제한적으로만 현장을 공개하는 폐쇄적인 행태로 비난을 샀으나, 더 비극적인 사실은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는 입국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같은 말을 쓰고 가장 즉각적인 핵의 위협에 노출된 이해당사자인 남한에서는 외신 기자들의 평양취재기를 어깨너머로 받아쓰며 간접 취재를 통한 보도 경쟁을 벌였다. 북한의 폐쇄성, 그로 인한 정보기관의 한계, 신뢰도 낮은 취재원, 여기에 언론의 속보 경쟁이 보태지면 오보가 생육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다.

2015년 언론은 북한군 고위 장성의 망명 소식을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라는 확인 불능의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 기사는 그가 황장엽 비서 이후 북한을 탈출한 최고위층 인사로 이름이 '박승원'이며 수개월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대응하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박승원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그가 일하는 모습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송했다. 당혹스러워진 통일부는 거물급 인사 망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현영철 처형 소식도 비슷하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되었으며,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 군관학교에서 사람들이 지켜보

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처형 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처형 이유는 4월 김정은 제1비서 지시를 불이행하는 '불경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언론은 약속한 듯 이러한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문제는 국정원 발표 다음날 현 부장의 모습이 북한 기록영화에 등장한 것이다. 숙청된 인물을 기록물에서 지우는 북한의 관례에 비추어 그의 등장은 곧 건재함을 나타낸다. 이어 조선중앙 TV에도 현 부장의 모습이 등장해 국정원 발표를 무색하게 했다. 국정원의 '첩보'가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 하면서 오보로 이어진 해프닝이다.

정보의 빈 공간을 추측으로 메꾸지 말아야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보도의 빈틈을 끝없는 추측과 관측보도가 채운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보자. 국방부는 사건 발생일 지뢰 폭발 사건을 출입기자들에게 알리고 폭발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공식 발표를 통해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 지뢰와 일치하고, 지뢰도 새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최근 북한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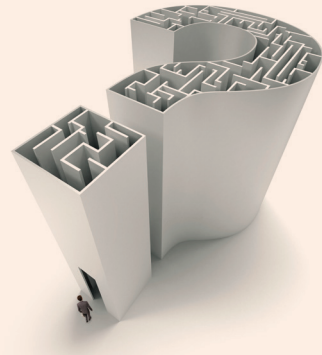
언론은 이후 도발 주체와 이유를 놓고 전문가 분석이라는 명분으로 끝없는 추측 보도를 이어갔다. 지뢰 매설은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는 일선 군단장의 충성 경쟁이라거나, 최근 북

귀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유도했다는 등의 내용의 그것이다. 사실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결코 확인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이다.

추측성 보도에는 대가가 따른다. 작년 7월 김대중 평화센터가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고 발표하자 일부 언론은 항공편 이용에 대한 해석과 추측을 내놓았다. 북측이 새로 지은 평양국제공항을 남한에 보여주기 위해 항공기 이용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다. 북측은 남쪽의 보도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평양국제공항을 선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양-개성 고속도로가 수리 중에 있어 손님 편의를 위해 항공편을 제안한 것이라며 무리한 추측을 이어갈 경우 방문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부 역시 북한이 언론보도를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의 폐쇄성이 오보의 일차적 원인, 그러나 남한의 내부 요인도 극복해야

정보기관의 판단 미숙이 선행할 경우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보기관의 발표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가급적 확대 보도를 자제하면 부작용이 줄어들지 모르나 언론의 생리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북한 관련 오보가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방북 취재가 봉쇄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는 대부분 선전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진실 보



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북한 소식의 취재원은 접경지대의 통신원이나 중국내 북수의 대북 소식통,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익명의 소식통, 북한 선교단체, 그리고 북한 출입이 허용되는 외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차, 3차 전언을 거치면서 일부 진실이라도 각색되거나 왜곡되기 쉽고, 이를 접한 언론은 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보도한다. 일단 언론을 거치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 문제가 커진다.

이런 상황적 요인 이외에 내적인 요인도 크다. 일본 지지통신 서울 특파원을 지낸 사사키 마코토는 ‘한국인은 왜 오보체질인가?’라는 일본 주간지 <세계주보>의 글에서 북한 관련 보도는 1) 어차피 부인되지 않으니까 써버린다, 2) 데스크에 북한관련 보도는 의심스러운 것이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3) 북한에 대한 주의주장이 앞서 사실보도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4) 북한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기자가 정보의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정보원이 말하는 대로 뉴스화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북한의 폐쇄성과 같은 외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적 요

인은 언론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탈북민 3만의 시대, 북한 관련 보도의 지평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채널이 늘어나며 보도량도 크게 증가했고, 탈북민이 출연하는 토크쇼와 북한 실상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이 북한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북한주민들도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이나 재산 상속 문제에 따른 각종 분쟁이 뉴스가 되기도 한다. 북한보도의 영역은 그만큼 넓다.

북한이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나라 국민은 정확하고 건강한 북한 소식을 접할 권리가 있다. 언론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2중, 3중의 확인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취재원을 가급적 명확히 밝히고, 사실 확인이 어려우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써야 한다. 추측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미심쩍은 정보는 뉴스화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설’임을 밝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훗날 다가올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